출산의 사회 경제적 효과

안기훈 · 조금준 · 홍순철 · 오민정 · 김해중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Abstract =

Socio-economic Effect of Childbirth

Ki Hoon Ahn · Geum Joon Cho · Soon-Cheol Hong
Min-Jeong Oh · Hai-Joong Kim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Currently, Korea is expected to have a profound negative impact on national productivity by aging accelerated due to low birth rates. Low birth rates cause the population decline, slowing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social welfare burden. A decreased birth rate brings a deflation in economy. Also low birth rate can decrease the number of jobs and shrink the production in short to medium term. Childbirth increases employment, marriage, the demand for durable goods, and raises the price. An increase of birth rat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n economy in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period. A national policy-making focus on the recovery of birth rate will contribute to the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low birth rate, socio-economic effect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촉진으로 국가생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였다(통계청).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보아도 2005년 합계출산율이 사상최저인 1.08명을 기록한 이후 1.4명을 넘지 못하였다. 2012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74명이고

한국은 최하위라는 보고는 그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970년 570만명이던 초등학교 학생수는 2014년 270만명으로 줄었고 2014년 180개 대학의 66만명의 대학생은 2034년이 되면 110개 대학에 대학생 39만명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제정이 고갈 될 것이 또한 예측된다. 이렇듯 저출산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부상한 지금, 출산율 제고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본 중설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제37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연수강좌에서 발표한 내용임.

교신저자: 안기훈, 서울시 성북구 인천로 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전화번호: 02-920-6777, 팩스번호: 02-921-5357

E-mail: akh1220@hanmail.net

본 론

출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제는 저출산이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여성이 또는 한 가정이 임신과 출산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다음의 네가지가 주요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가치관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양육비용의 증가, 고위험임신 및 난임의 증가가 그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년 326,104건, 2014년 305,507건이었다(통계청).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 또한 2010년 6.5이던 것이 2014년 6.0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혼연령은 증가하고 있으며 30세 이하 출산율은 감소하고 30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2.1%로 이는 아직 한국의 통념상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겪는 것이 어려움을 뜻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최근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의 또 다른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답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2009년 55.9%에서 2012년 46.3%로 감소하여서 우리 사회에서 ‘결혼=출산’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유경 등, 2013). 우리나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증명된 명제이다. 출산의 의지가 있는 이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1981년 둘째 출산아는 512,085명이었던 것이 2013년 211,200명으로 감소하여 둘째 출산율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첫째 출산이후 출산을 중단한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빈도상으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소득고용불안정, 출산건강수준열악, 일-가정 양립 곤란의 순이었다. 즉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유경 등, 2013).

저출산의 결과는 직관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사회복지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족내 구성원의 수가 감소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의 개념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또한 2030년대 이후 총인구수 역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2010년 730만명이었으나 2030년이 되면 450만명, 2050년이 되면 32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다(서울시교육청).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았을 때 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10년 72.8%였으나 2050년에는 53.7%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15~34세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의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당 잠재 G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채권금리하락의 ‘경제안정’을 가져오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에 디플리에션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4.4%였으나 2030년이 되면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잠재성장률은 생산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이찬영 등, 2011). 따라서 출산율 저하는 노동의 양적투입을 저하시키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저축율을 저하시켜 결국 투자가 둔화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 248조 1,330억원이었으나 2043년 246조 5,070억원으로 최고점을 형성한 후 2060년에는 마이너스 214조 2,25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2008)

만일 출산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가까운 중국의 예를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혁명 후 근대적인 공산주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농공업의 대중산정책의 일환으로 대약진운동을 벌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민공사라는 집단농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시행으로 약 5,000만명이 기아로 사망하게 되었고 중국경제는 저성장을 겪으며 출산율이 급락하였다. 이후 1960년대 베이비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여파로 1970년대 생산활동 인구에 편입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지난 50년간의 중국생산활동인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비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산붐이 발생하면 그 출생한 인구가 15~34세의 시장진입세대에 이를 때 시장은 호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 대규모 베이비붐의 사회진출로 물가불안을 겪었다. 전세계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짧은 베이비붐이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Gary Becker 교수는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가계보다는 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Becker G, 1960). 즉 가족구성원이 담당하던 여러 기능을 학교나 공공기관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며 지식사회로 갈수록 행복의 기준이 자녀가 주는 기쁨보다 임금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임금이 증가할 때 신생아출산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은 장기적으로 시장진입세대를 증가시켜 취직, 결혼, 출산으로 내구재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킨다. 한국의 경우, 평균 노동시장 진입연령은 24세, 주택구입연령은 37세이므로 출산붐이 있는 경우 약 2~30년 뒤 물가상승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김과 우의 분석은 상당히 흥미롭다(김현숙과 우석진, 2009). 이들은 출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볼 때 생애주기를 크게 4개로 분류하고 각 연령 단계에 대한 산출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 접근

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청소년기 및 청년기/노동시장참여기간/은퇴기 이후의 4영역으로 생애주기를 나누어 관찰한 것이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에서는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와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소아과, 산부인과 등),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기타 소비로 분류할 수 있고, 출산,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녀 1명당 약 0.17개의 직/간접적 일자리와 약 4천 4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가 있다. 가장 효과가 큰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부문으로 자녀 1명당 약 0.1개의 일자리와 2천 5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를 보여준다.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경우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속하게 되는데, 산업으로는 크게 공교육 부문, 사교육 부문, 소비지출 부문이 해당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문의 효과는 자녀 1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가 약 0.56개이고 생산효과는 연간 3천 2백만원이다.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0.16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효과는 약 2천 27만원이다. 노동시장 참여기간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성인 1명당 약 0.067명의 일자리와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다. 은퇴기 이후에는 노인 1명당 약 0.1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천 4백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총괄하면 일자리창출 효과의 경우 약 1.15개의 일자리가 자녀 1명의 출산을 통해 생애주기 동안 창출되는데, 노동시장참여기간 및 은퇴기에 비해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와 학령기의 생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여 저자들은 장기적인 효과에 비해서도 단기 및 중기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저자들은 산출효과의 경우 자녀 1명이 일생동안 약 12억 2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계산하였다. 일자리 창출효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베이스라인보다 5%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출산하였을 경우 생애주기 상으로 보았을 때 약 2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계된다. OECD평균인 합계출산율 1.6을 달성했을 경우, 영유아기에서는 2만 4천개, 학령기에서는 10만 4천개 등 생애주기로 보면 16만 7천개의 일자리가 창

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생산효과의 경우 5%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을 경우,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약 26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평균이 합계출산율 1.6에 도달했을 경우, 생애주기 상으로 보면 총 177조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자면 한 개인이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15명,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 2천만원을 창출하는 것이다.6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

저출산은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함으로 인해 일자리창출, 생산유

발, 소비지출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입안에 있어 저출산에 그 근본적인 초점이 맞추는 것이 장기간뿐 아니라 단기간의 사회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 <http://kosis.kr/>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이찬영, 태원유, 김정근, 손민중.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2011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Becker G.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1960 Columbia University Press
김현숙, 우석진.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009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